

일학습병행, 청년을 지역에 남긴다: 소멸위험지역 8곳 전부에서 정착률 상승

일학습병행 재직자 훈련에 참여한 청년 학습근로자 30,872명과 비교집단 69,2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청년은 훈련 5년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비율이 66%로, 참여하지 않은 청년(56%)보다 10%p 높았음.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역 8곳 전부에서 정착률 상승효과가 확인되었고, 이 중 6곳은 전국 평균(10%p)을 웃돌았음. 소멸위험이 가장 큰 전남에서 효과가 14%p로 가장 컸음. 일학습병행은 청년의 고용 안정(고용유지율 5%p 상승)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동이 발생할 때는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나타나, 훈련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여건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서의 직업훈련 효과 검증 필요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에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가 청년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부족함
- 지방의 청년 정책의 경우 주거 및 정주 여건 중심으로 설계되어 훈련이 정책적으로 지역 정착 수단으로 검토된 사례는 드물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참여는 훈련받은 지역에 대한 정착률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¹⁾
- 본 분석은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지방(수도권 제외) 정착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차별점임
 -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전체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분석에서는 훈련 참여 당시 만 나이 기준 40세 미만 학습근로자로 제한하여 청년 인구의 정착을 살펴봄
 - 17개 시도 기준 동일지역 정착률과 함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청년들이 얼마나 정착하였는지, 수도권 외 지역 중 어느 지역의 정착률이 가장 높은지를 중심으로 분석함

※ 이 글은 '최수현 외(2025), 『2025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사업 5. 일학습병행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함

1) 안선민 외(2021) 재직자 훈련 이수·수료자의 시도 기준 동일지역 정착률은 통제집단에 비해 훈련 시점 기준 3년 뒤 14.0%p, 5년 뒤 10.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상균 외(2022)에서도 재직자 훈련 이수·수료자의 동일지역 정착률이 통제집단에 비해 최대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남(훈련 시점 기준 3년 뒤 기준)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HRD-Net」(2014~2024), 「고용보험 DB」(2014~2024)

- 분석 대상: (처치집단) 2014~2019년 일학습병행 재직자 훈련 이수·수료자 중 훈련 시작 시점에 만 40세 미만인²⁾ 학습근로자(30,872명)
(비교집단) 학습근로자의 입사 동기(동일 기업에 동일 연도 고용보험 취득) 중 성향점수가 유사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교집단(69,279명)
- 분석 자료: HRD-Net, 고용보험 DB(2024년 8월 기준)
- 분석 방법: 성향점수매칭(P propensity Score Matching)³⁾
- 지역 정착은 훈련 시작 연도 기준 5년 후 시점에 근로하는 지역을 정착 지역으로 정의하며, 동일지역 정착률은 훈련자(근로자) 중 5년 전과 근무지가 동일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함
 - ‘고용 유지’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의미함

$$\begin{aligned}
 (1) \text{ 고용유지율} &= \frac{\text{5년 후 근로자 수}}{\text{훈련자수(근로자수)}} & (2) \text{ 수도권정착률} &= \frac{\text{5년 후 수도권 근로자수}}{\text{5년 후 근로자 수}} \\
 (3) \text{ 지방정착률} &= \frac{\text{5년 후 지방 근로자 수}}{\text{5년 후 근로자 수}} & (4) \text{ 동일지역정착률} &= \frac{\text{5년 전과 근무지가 동일한 사람수}}{\text{훈련자수(근로자수)}} \\
 (5) \text{ 고용유지자의 동일지역정착률} &= \frac{\text{5년 전과 근무지가 동일한 사람수}}{\text{5년 후 근로자수}} \\
 (6) \text{ 지방훈련자(근로자)의 지방정착률} &= \frac{\text{지방훈련자(근로자)중 5년 후 지방 근로자 수}}{\text{지방 훈련자수(근로자수)}} \\
 (7) \text{ 수도권훈련자(근로자)의 지방 정착률} &= \frac{\text{수도권훈련자(근로자)중 5년 후 지방 근로자수}}{\text{수도권훈련자수(근로자수)}} \\
 (8) \text{ 지방훈련자(근로자)의 수도권 정착률} &= \frac{\text{지방훈련자(근로자)중 5년 후 수도권 근로자수}}{\text{지방 훈련자 수 (근로자 수)}}
 \end{aligned}$$

02 분석 결과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청년은 해당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10%p 높음

- 동일지역 정착률이 처치집단에서 10%p 더 높음. 처치집단에서는 66%의 청년 학습근로자가 5년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56%만이 5년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함
 - 5년 후 시점에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산출한 ‘고용 유지자의 동일지역 정착률’은 처치집단 76%, 비교집단 69%로 처치집단이 7%p 높음
-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청년의 5년 후 고용유지율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5%p 높게 나타남
- 지방의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지방에 정착할 확률이 더 높음
 - 지방 훈련자의 지방 정착률은 75%로 비교집단에 비해 8%p 더 높음
- 지역 이동성은 일학습병행 미참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5.5%만 5년 후 지방으로 이동한 반면,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비교집단의 약 9%는 5년 후 지방으로 이동함. 반대로 지방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11%만 5년 후 수도권으로 이동한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지방 근로자의 16%가 5년 후 수도권으로 이동함
- 수도권과 지방 정착률은 근소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수도권 정착률은 비교집단에서 1%p 더 높았으며, 지방 정착률은 처치집단에서 1%p 더 높아, 일학습병행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지방에 정착한 비율이 1%p 더 높음

2) 본 연구에서는 10~30대(40대 미만)를 청년으로 정의함

3) 공변량은 성별, 출생 연도, 근무지역, 기업 규모, 세부 산업 총 5가지임. 로지스틱 회귀로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최근접 매칭(최대 1:3, 중복 매칭 제외)을 적용함

표 1 | 청년 세대 일학습병행 재직자 훈련 효과 분석 결과

성과 변수	처치집단(참여)	비교집단(미참여)	참여효과(ATT) (표준오차)
	평균	평균	
고용유지율	0.86	0.81	0.05*** (0.00)
수도권 정착률	0.42	0.43	-0.01*** (0.00)
지방 정착률	0.58	0.57	0.01*** (0.00)
동일지역 정착률	0.66	0.56	0.10*** (0.00)
고용 유지자의 동일지역 정착률	0.76	0.69	0.07*** (0.00)
지방 훈련자(근로자)의 지방 정착률	0.75	0.67	0.08*** (0.00)
수도권 훈련자(근로자)의 지방 정착률	0.055	0.094	-0.039*** (0.00)
지방 훈련자(근로자)의 수도권 정착률	0.11	0.16	-0.05*** (0.00)

주 1) ***p<0.001, **p<0.05, *p<0.1

주 2) 표준편차는 지면상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보고서 참조

03 시도별 정착 효과와 지역 이동성

소멸위험지역에서 높은 정착률과 유의한 정착률 상승효과

- 청년 학습근로자의 시도별 동일지역 정착률은 경북, 전남 지역이 각각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전국 평균 66%)
 -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부산 등 총 8곳임. 이 중 3개 지역(경북, 전남,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동일지역 정착률을 보이며, 나머지 5개 소멸위험지역(충북, 강원, 충남, 부산, 경남)에서도 동일지역 정착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가 0.5 미만인 지역을 의미함(이상호(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
-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률이 증가하고, 소멸위험지역에서의 청년 학습근로자 정착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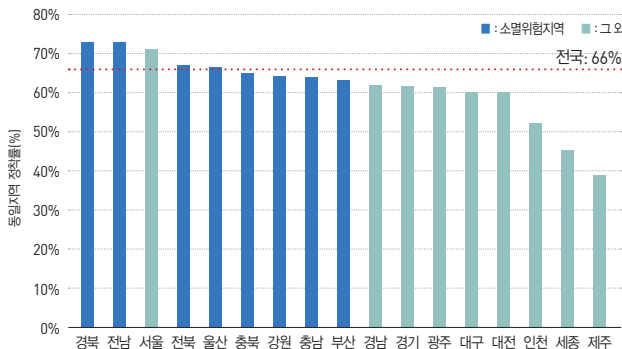


그림 1 | 경북·전남 73%, 소멸위험지역일수록 훈련 청년이 더 많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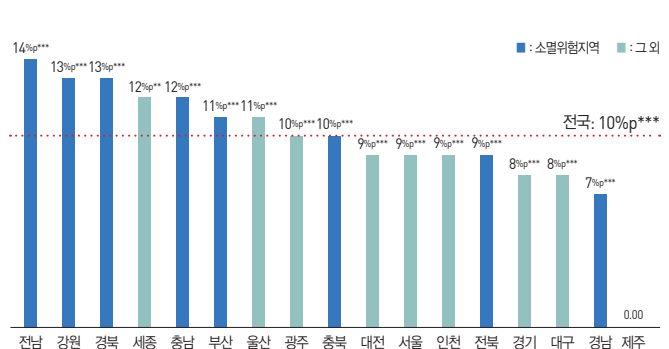


그림 2 |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터 정착률 상승, 전남이 14%p로 최대

출처: HRD-Net, 고용보험 DB(2024년 8월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파랑색으로 표시된 시도는 2024년 분석 기준 소멸위험지역임(출처: 이상호, 2024)

출처: HRD-Net, 고용보험 DB(2024년 8월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파랑색으로 표시된 시도는 2024년 분석 기준 소멸위험지역임(출처: 이상호, 2024)

주 2) ***p<0.001, **p<0.05, *p<0.1

- [그림 2]는 지역별 일학습병행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일지역 정착률 차이(ATT), 즉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가 해당 지역의 청년 정착률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 줌
 - 소멸위험 8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10%p) 이상의 동일지역 정착률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2개 지역에서도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동일지역 정착률 상승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동일지역 정착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은 이상호(2024)의 지역소멸위험지수 기준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 지역임[전남(0.329) < 경북(0.346) < 강원(0.388),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큼]
 -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모든 시도에서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동일지역 정착률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
 - 제주도의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규모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며, 제주 지역 자체의 청년 정주 비율이 높지 않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모든 소멸위험지역에서 일학습병행 처치집단의 동일지역 정착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초고령화 국면에서 일학습병행이 기여한 직접적 사회적 효과로 볼 수 있음

| 훈련받은 동일지역 정착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동 시에는 서울·경기로의 쏠림 존재

- 훈련 5년 후 여전히 고용 상태인 26,613명의 지역 이동성을 보면, 17개 모든 시도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은 동일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경기, 서울로의 이동 비중이 높음. 다만 경남, 광주, 세종, 전남 지역의 경우 동일 생활권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경기도나 서울로의 이동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표 2>는 훈련 5년 후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출되어, 분모가 더 작으므로 <표 1>의 '동일지역 정착률'보다 약 8~10%p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표 2 | 17개 시도 모두 '제자리'가 1순위, 떠날 때는 경기·서울로

훈련 지역	동일지역 정착률	2순위 이동 지역	훈련 지역	동일지역 정착률	2순위 이동 지역
전남	84.40	광주(3.56)	광주	73.92	전남(7.39)
서울	82.20	경기(10.69)	충남	73.79	경기(9.40)
경북	82.17	대구(4.26)	경기	72.05	서울(17.51)
전북	76.75	경기(6.51)	대구	70.74	경북(8.98)
부산	74.79	서울(9.48)	대전	70.65	서울(9.82)
울산	74.51	서울(7.02)	인천	65.71	서울(15.33)
강원	74.38	경기(11.02)	세종	54.76	충북(14.29)
충북	74.27	경기(7.47)	제주	48.66	서울(22.09)
경남	74.03	부산(8.40)			

출처: HRD-Net, 고용보험 DB(2024년 8월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훈련 5년 후 여전히 고용 상태인 26,613명 기준. 동일지역 정착률은 훈련 지역과 5년 후 근무 지역이 동일한 사람의 비율이며, 2순위 이동 지역은 동일지역 정착을 제외하고 5년 후 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동일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수도권 내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높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경기도는 충남(2.31%), 서울은 부산(0.94%), 인천은 충남(1.53%)임
- 5년 후 지방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임. 경북에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 훈련 참여 비율이 높은 일학습병행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모든 지역에서 훈련받은 동일지역에 대한 정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동일지역 정착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역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04 시사점

- 본 분석은 일학습병행 참여자와 참여자의 입사 동기를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먼저 분석 대상이 재직자이며 서로 입사 동기라는 점은 지역 정착 의지가 어느 정도 유사한 집단임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치집단에서의 정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장기 훈련 경험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정착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 더불어 경북, 전남과 같이 지역산업이 뚜렷한 지역은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관련 자격증 취득과 경력이 해당 지역에서의 정주 확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일학습병행을 통한 장기 훈련 경험은 청년을 지역 노동시장에 붙들어 두는 '닻'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음

대상	분석에서 확인된 것	정책 방향
소멸위험지역 8곳	정착률이 모두 60% 이상이고, 상승효과도 전 지역에서 확인. 전남·경북·강원에서 효과가 가장 큼	훈련 물량의 지역 우선 배정
지방에서 훈련받은 청년	지방 잔류를 75%로 미참여자(67%)보다 높으나, 11%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	수료 직후 이행기 지원
제주·세종	정착률이 각각 48.7%, 54.8%로 가장 낮고 상승효과도 제한적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별도 접근 필요